

강준만의 「조희연: 민중의 분노 · 위협이 대안인가?」를 읽고

황진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객원연구원

월간 『인물과사상』 5월호에 실린 강준만의 「조희연: 민중의 분노 · 위협이 대안인가?」를 읽고서 쓴다. 강준만의 진보 진영에 대한 그간의 애정 어린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쓴소리를 했었던 그 취지가 무색하지 않게 이번 글에서도 어김없이 각성의 울림으로 다가왔었다. 하지만 그러한 취지와는 별개로 각론에 들어가면 조희연의 민중의 분노 · 위협의 동원정치를 제도 밖의 정치로 설정하고, 현실성이 없다면서 대신 제도 안의 정치적 변혁을 주장하는 바에는 이견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한다. 요컨대 제도 안/밖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으로서의 접근은 민중의 파토스를 자칫 자위행위로 배설하는 것으로 강등, 낭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적이 필요하다.

김만흠은 제도 안의 정치관에 일관성이 있는가¹⁾

강준만은 최장집과 조희연의 진보 논쟁에 대한 김만흠의 다음과 같은 관전

평인 “민주화 이후 체제에서 집권 세력이 주도하는 제도 밖의 정치적 동원 전략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성공하기도 쉽지 않다. …… 혁명적인 흑백 대결보다는 공존 모델로의 전환이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이다”²⁾에 동의하면서 인용했다. 그러나 김만홍은 제도 안의 정치 쇄신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매니페스토 논의에서 강준만이 강조했던 제도 안의 정치와는 어색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평소 지식인의 일관성을 중요시하는 강준만이 김만홍의 논지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관철하려 한 것은 어색해 보인다.

매니페스토(manifesto) 논의가 본격적으로 매체를 타고 선거로까지 이어진 것은 지난해 들어서였다. 당시 김만홍은 “유권자의 선택기준은 다양할 것인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정책선거’를 강요한다. 매니페스토와 같은 정책에 대한 검증 운동은 바람직하고 필요하지만, 유권자의 선택 기준이 반드시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³⁾(굵은체는 필자주)라며 실질적으로 매니페스토 논의의 싹을 잘라버렸다.

아무래도 김만홍은 “매번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정책선거론”과 매니페스토를 동급으로 두고 있는 듯하다. 매니페스토는 “정치의 기능이 적절한 시기적 선택에 있고, 정당의 존재 가치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을 복수의 선택으로 집약하며,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은 재원을 동반한

1) 이하 김만홍에 대한 지적은 황진태, 「진보정당, 인물 올인정치가 아닌 정책정치로 나가야 한다」, 월간 『이론과 실천』, 2006년 9월호 91~93쪽에서 상당 부분을 재인용했다.

2) 김만홍, 「흑백 대결보다는 공존 모델 모색해야」, 『한겨레』, 2007년 2월 22일, 27면.

3) 김만홍, 「민주화 이후의 한국정치와 노무현 정권」, 한울, 2006, 9쪽.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즉, 매니페스토에 담겨질 내용은 검정과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 실행 체제와 방식, 정책 실현을 위한 공정표 등을 담은 “기존의 선거 공약에도 이 같은 요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를 전면에 내세우거나 이 같은 형식을 전제로 작성되지 않았”⁴⁾다는 점에서 매니페스토(정책공약)와 기존의 선거 공약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계속해서 김만홍의 주장을 들어보자.

“기본적으로 시민단체와 언론이 완벽한 정책 검증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또 정책의 목표, 우선순위, 절차, 자원, 기한 등이 정책 검증의 기준으로 제시되었지만, 여전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었다.”⁵⁾

그렇다면 ‘천상의 이데아 정치’를 하자는 말인가. 어떤 제안이든 장단점이 있는 법, ‘여전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야말로 추상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매니페스토가 한국 정치에 뿌리내리고, 시민단체에서 공약실천 모니터링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김만홍을 만족시킬 만한 ‘완벽한 정책 검증’ 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기존의 정책 검증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해보지도 않고 문제점이 있다며 시작부터 발목을 잡는다면 어떤 정책정치의 공고화도 불가능하다.

“알다시피 중앙정치의 소용돌이가 지방선거를 지배했고, 중앙정치는 거대 정당의 싸움이였다. 따라서 매니페스토 운동과 그에 따른 정책 검증이 선거에서 당락에 별

4) 이홍천, 「매니페스토 도입을 제안하며: 한국 정치는 변할 수 없는가, 월간 『인물과사상』, 2006년 3월호, 66~67쪽.

5) 김만홍, 『민주화 이후의 한국정치와 노무현 정권』, 한울, 2006, 250쪽.

다른 변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⁶⁾

사실 김만흠의 저서 곳곳에서 노무현 정권을 예로 들며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⁷⁾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매니페스토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고 있다. 누가 ‘반드시’ 를 붙여가며 매니페스토 지상주의 논리를 펼쳤으며 어떤 전문가들이 매니페스토를 ‘강요’ 했는가? 극단적인 수사는 논의의 싹을 자를 뿐, 떡잎도 못 본다. 정책 정치로의 이행이 이제 갖 유아기 수준인 한국 정치에서 매니페스토 논의를 선거에서 ‘별다른 변수가 아니었다’ 며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앞으로 매니페스토가 ‘선거의 변수’ 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치사가 아닐까. 매니페스토는 대안으로서 필요조건은 못 되지만 충분조건은 충족시킨다.

이렇게 정치 비평 범주가 다른 분야도 아니고 제도 안의 정치 논의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된 김만흠을 인용한 강준만 또한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발견된다. 그는 “노 정권에 환멸을 느낀 대중이 보수적 저항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으로 그들의 분노를 끌어낼 수 있단 말인가? 설사 그 일이 가능하다 한들 성공할 수 있을까?”⁸⁾라고 하면서 진보 진영 내부의 구체적인 노력(에 관해서는 뒤에서 서술하겠다)을 못 보고, 비판론을

6) 김만흠, 『민주화 이후의 한국정치와 노무현 정권』, 한울, 2006, 251쪽.

7) 김만흠은 대통령제의 폐해와 관련하여 “지역주의 구도의 해체를 과제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분열의 해체가 아니라 분열을 통합하는 양식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과제이다. …… 승자 독식의 한국 대통령제는 적대적 대립 정치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현행 대통령제는 의회와의 관계 설정 등에서 민주화 시대 정치체제로서 정합성을 상실하고 있다. …… 제도 개편이 요구된다”(김만흠, 위의 책, 186쪽)며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선거정치의 문제점의 언급에서도 “선거정치가 정부권력의 보편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제가 되고, 이를 토대로 국민들의 욕구 표출과 정치 행위가 제도적으로 수렴되는 정치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여러 정치사회적 조건과 제도가 부합해야 한다”(김만흠, 위의 책, 209쪽)고 밝혔다.

8) 강준만, 「조희연: 민중의 분노·위협이 대안인가?」, 월간 「인물과사상」 2007년 5월호, 76쪽.

내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정책을 차분하게 입안하고 실천해 나가”⁹⁾라는 좌충우돌하는 주문을 내려 정작 진보 진영은 강준만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싶어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다.

불분명한 동원정치 필요의 기준, 또 하나의 추상화 가능성

또한 강준만은 경실련의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이나 한미 FTA 저지 운동의 동원정치는 “응당 지지할 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분노, 위협의 동원정치를 이용하자는 조희연의 주장은 무엇이 동기였는가. 바로 한미 FTA 때문이었다.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해서 동원정치를 활용하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강준만은 한미 FTA 그 이상의 동원을 우려한 것일까. 혹시 아무도 염두하고 있지 않은 폭력혁명일까?

강준만은 “조희연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아비투스(습속)에 의해 자꾸 큰 그림(거대 담론)만 그리려 드는 게 안타깝”¹⁰⁾이라고 했지만 분노·위협
의 동원정치가 폭력혁명인지, 한미 FTA 저지인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한 강준만의 진보 진영에 대한 불분명한 비판의 기준 설정 또한 또 다른 거시·추상 담론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정세의 불확실성 혹은 국민직접정치 실현의 맹아?

얼마 전 우석훈의 한미 FTA 관련 국민투표 실시 주장에 대해서 김보현의 반론과 필자의 재반론이 『프레시안』 『레디앙』 지면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었다.

9) 강준만, 「조희연: 민중의 분노·위협이 대안인가?」, 월간 『인물과사상』 2007년 5월호, 72쪽.

10) 강준만, 위의 책, 74쪽

지난 논쟁에서 필자는 국민투표를 주저하는 지식인들의 유보론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우려한 것은 그 일면에 민중의 판단력에 의심을 갖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상식적으로 국민이 민주공화국의 일원으로 당연히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야 한다고 볼 때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데는 분명 책임을 필요로 한다. 그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 문제일까. 오히려 민중의 판단이 파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법으로 두려움을 심은 김 교수의 변은 작금의 엘리트정치를 공고화해주는 것은 아닐까”¹¹⁾라고 지적했다.

김보현은 이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 패배할 때 어떻게 패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둘 필요가 있다. 나는 ‘우리’가 지는 경우 절대로 국민투표의 방식으로 패배를 확인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면서 “나는 국민투표의 길을 ‘우리’의 가능한 선택지들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반 FTA 진영 내에 국민투표의 가치를 절대화하는 경향이 실재함을 느끼고 있고 그 경향이 초래할 부정적 귀결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¹²⁾고 말했다. 이 시점에서 하나의 현상에 대한 다른 시각을 서로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반론은 안 썼다.

그렇지만 이러한 민중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시초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찍이 청년기의 마르크스는 여론정치를 통하여 “국가가 상위를 차지 하던 기관에서 사회에 하복(下服)하는 기관으로 전환된다”며 이는 “정치와 국가 기능의 일반적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강권으로부터 해방된 시민사회가 민주주의와 여론정치를 통해 국가를 통제하는 것

11) 황진태, 「국민투표에라도 목매야 한다」, 『레디앙』, 2007년 4월 10일.

12) 김보현, 「국민투표에 목매자니 걱정된다」, 『레디앙』, 2007년 4월 12일.

으로 재건될 수 있”¹³⁾하면서 희망의 여론정치를 밝혔지만 후기 마르크스의 저술에서는 여론정치는 삭제되고 차가운 정치경제학만이 남게 되어서 교조적, 관료적 공산주의로 흘러갔었는데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민중의 파토스를 이용한 정치에 대한 두려움이 김보현이나 강준만의 몸체화되어 생체권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노무현을 마르크스에 비교하는 것은 어색하겠지만 민중을 대하는 자세가 바뀐 것만큼은 닮아 있다. 탄핵정국 속에서 결국 민중의 지지를 통해서 청와대로 돌아온 그가 이후에 보인 폐쇄적인 엘리트정치는 강준만이 단언하듯이 “영터리 포퓰리즘”이었다. 민중의 파토스(일시적인 격정이나 열정)를 배신한 것은 민중이 아니라 다름 아닌 노무현이다. 그런데 강준만은 한미 FTA 체결 이후의 민중의 결집된 파토스를 제도 안의 정치로 수렴시키려는 시도를 한 민중을 노무현의 오류로 취급하면서 함께 영터리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중의 동력 자체를 부정, 무력화시키는 꼴이다.

필자가 반론문에서 강조했지만 강준만이 구분해서 비판한 ‘제도 안의 정치와 제도 밖의 정치’ 혹은 ‘동원정치와 구체적인 정책’이라는 틀로서 일련의 증폭되고 있는 민중의 파토스를 판단하는 것은 사태의 일면만을 바라보고 있다. 국민투표는 단순히 민중의 파토스를 해소하려는 해우소가 아니다. 탄핵정국에서 민중에 의한 귀환에도 불구하고 배신한 노무현이 벌여놓은 이라크 파병, 대추리 사태, 황우석 사태 그리고 한미 FTA 체결에서 드러난 폐쇄적 엘리트정치에 대한 필연적 대응이다.

13) 『Marx Engels Werke』 19권, 27쪽; 황태연, 『계몽의 기획: 근대정치사상 연구』 동국대출판부, 2004, 332쪽 재인용. 황태연은 청년 마르크스를 긍정하면서 여론정치가 삭제된 후기 마르크스를 교조적으로 변했다면서 비판했는데, 그러나 지난 탄핵정국에서 민중의 의견 수렴보다는 이를 무시하고 탄핵정국의 선동자로 나섰던 그의 행보는 그 자신이 비판했던 후기 마르크스와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엘리트정치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 민주공화국의 본디 어원이 뜻하듯이 국민직접정치 모델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령 ‘새사연 모델’의 국민직접정치 모델에서는 국민소환권, 시민감사제, 청빈관료제 등의 (강준만이 주문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차분하게’ 마련하고 있다. 국민투표는 이들 여러 ‘경우의 수’ 중에서 하나일 뿐이다. 도리어 국민투표를 기점으로 하여 동원정치로 불리든 제도 밖의 정치로 불리든 간에 민중의 파토스를 집약하여 제도 안의 정치의 변화를 조성시키는 계기¹⁴⁾가 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노·위협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차분하게 입안하고 실천해 나가는 게 아닐까?”¹⁵⁾라는 강준만의 제언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노·위협이 동원정치를 통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차분하게 입안하고 실천해 나가는 게 아닐까?”(굵은체는 필자주)

비관적인 언론 지형 속에서, 투항인가 저항인가

“개혁, 진보 진영 내부에서조차 서로 생각이 다를 때에 합리적으로 소통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강준만의 지적은 ‘미디어 보수’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뒤이어 “설사 그 일이 가능하다 한들 성공할 수 있을까”¹⁶⁾라고 찬물을 끼얹은 것은 건설적인 지적이 아니다. 과거 강준만의 ‘조선일보 제뭇 찾아주기 운동’ 초창기에 개혁 진영에서 누군가가

14) 김보현도 재반론에서 “정치(운동)는 추상적 원리의 무매개적 구현이어서도 종교적 신념의 결단적 이행이어서도 안 된다. 특정한 제도의 물신화는 당초의 의도와 별개로 민주주의를 오히려 형식화하고 그 확대와 심화를 지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김보현과의 결정적인 시각 차이겠지만 국민투표를 ‘종교적 신념의 결단적 이행’ ‘특정한 제도의 물신화, 형식화’로 보지 않으며 국민투표는 민중의 파토스를 제도 안의 정치로 수렴하는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일 뿐이다.

15) 강준만, 「조희연: 민중의 분노·위협이 대안인가?」, 월간 『인물과사상』 2007년 5월호, 72쪽.

‘설사 그 일이 가능하다 한들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론으로 폄하하는 의견이 나왔다면 당시의 강준만으로서는 가만히 있었을까.

국민투표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실질적인 국민적접정치 실험을 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수구적인 반차베스 세력의 쿠데타와 자본 파업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보수 언론의 갖은 여론조작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대항 매체를 통하여 결국 자본 파업과 반쿠데타를 저지한 실사례가 있다.¹⁷⁾ 굳이 베네수엘라라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비관적인 언론 지형을 현재의 불리한 대립구도를 포기하는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 ‘설사 그 일이 가능한가’라는 강준만의 비판론은 지금까지 지역주의를 비롯한 성역과 금기에 도전한 강준만의 행보를 감안할 때 결코 강준만답지 못한 발언이다.

진보 진영의 내부 성찰 움직임도 바라봐주기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노·위협의 동원정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차분하게 입안하고 실천해 나가는 게 아닐까?”¹⁸⁾ “개혁, 진보 진영 내부의 매서울 정도로 아픈 성찰이 충분하게 선행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¹⁹⁾라는 강준만의 진정성이 묻어나는 진보 진영 비판에서 이제 진보 진영 내부의 변화하고자 하는 모습에도 주목해줬으면 한다. 사실 진보 진영에게 정책에 주력하기를 주문하지만 이는 진보 진영 내부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미 FTA가 아니면 무슨 대안과 무엇으로 먹고살겠느냐는

16) 강준만, 「조희연: 민중의 분노·위협이 대안인가?」, 월간 「인물과사상」 2007년 5월호, 76쪽.


17) 보수 언론의 압도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차베스가 주도한 베네수엘라 민중 혁명의 성공 과정은 김병권 외,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시대의창, 2007)를 참조하라.

18) 강준만, 「조희연: 민중의 분노·위협이 대안인가?」, 월간 「인물과사상」 2007년 5월호, 72쪽.

19) 강준만, 위의 책, 76쪽.

반문에 진보 진영 내부에서는 거시 담론 도그마에서 벗어나려는 일련의 진보적 싱크탱크들(희망제작소, 세교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등)의 설립과 대안경제모델(새사연 모델, 신정완, 김형기 등)이 개발되어 담론화, 여론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강준만이 지적하는 큰 그림만 본다는 진보 진영은 그들이 사용하는 말투에서부터 민중들에게 다가가려고 진보적 싱크탱크들 간에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²⁰⁾ 그야말로 “성찰의 딜레마”²¹⁾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음을 해명하고자 한다.

강준만의 제도 안/밖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으로의 접근은 민중의 파토스를 자칫 자위행위로 배설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정이 필요하다. 보았던 필자의 시각이 강준만의 시점과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논의의 폭이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 더불어 강준만이 말하듯이 진보 진영은 ‘이론적으론 성찰이 투철한데 실천 전략에선 그렇지 않은 거 같다’는 주장에 약간의 해명은 필요하다 싶어서 본 줄고를 썼다.

강준만의 진보 진영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의 울림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부탁드린다. 

20) 정제혁, 「진보야, 말 좀 쉽게 해라」, 『메디앙』, 2007년 3월 16일 기사 참조.

21) 강준만, 「조희연: 민중의 분노·위협이 대안인가?」, 월간 『인물과사상』 2007년 5월호, 67쪽.